

충청지역민도 인권보호해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오전 10시 20분

■ 장 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실(9층)

---

■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2. 경과보고 및 조직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 1. 경과보고

- 10월 4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제안
- 10월 8일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추진위원회 결성
- 10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10월 19일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확대연대제안
- 10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2. 조직현황

### 1)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 2) 참여단체 : 67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청지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기톨릭 가정폭력상담소, 대전경찰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NCC, 대전YMCA, 대전YWCA,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벨엘의 집,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모두사랑, 생태교육연구소터,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장애인복지신문 대전지사, 장애인야간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증평시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교구가톨릭농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복지연합

### 3) 지식인 참여(학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 총 120인

학계) 곽현근, 권선필, 권중돈, 권지성, 김 구, 김건엽, 김병미, 김선태, 김용세, 김중서, 김혜천, 김홍수, 나백주, 류종영, 류진석, 박 경, 박미은, 박서호, 박수경, 박재묵, 배진아, 손명환, 심문보, 안성호, 안정선, 양영모, 유원섭, 이규금, 이동규, 이상덕, 이석용 외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일동 22인, 이승길, 이왕기, 이재영, 이준우, 이창기, 전 양, 정순진, 정연정, 조연상, 차재영, 최호택  
법조계) 김연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 이하 27인, 김난희, 유진범, 김귀덕, 남현우, 송동호, 여운철, 김두현, 김주현, 나경수, 류광해, 문현웅, 박범계, 소삼영, 오성균, 이강훈, 이봉재, 이상호, 이정희, 이종명, 이현주, 장동환, 정보건, 정연기, 조경임, 최석진, 허양윤, 홍석조), 이연숙, 이종명, 조경임, 한원규, 허양윤

의료계) 김귀애, 김수영, 김주연, 김형돈, 김호상, 나준식, 문상원, 박찬욱, 배은영,  
서온철, 송관욱, 신명식, 신현정, 윤종삼, 이문희, 전희선  
종교계) 김규복, 김봉구, 김용우, 남재영, 원용철, 이건중, 이재성

#### 4) 공동대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안정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회장 김연수
- 대전NCC 회장 이건중

#### 5) 공동간사단체

- 대전성매매인권지원상담소 채계순 소장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김봉구 소장
-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정희대 인권위원장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충청지역민도 인권보호해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문

자살률 충남 1위, 충북 3위, 대전 5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순위를 앞다  
뛰야 할 마당에 충청지역민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순위에서 우리는 왜 앞  
다뛰야 하는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로 인해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교육격차, 주거불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어 결국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  
져 보장받지 못 하게 한다. 결국 인권보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충청지역민들은 신속한 인권보호와 구제는 불가하고 도움을 요청  
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는 전국적 범위에서 발  
생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필요하다. 지난 2004년부터 인권보호  
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지역사무소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부  
산·광주·대구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충청지역민만이  
중앙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보호를 의존하고 있어 지역적 역차별이 발생  
하고 있으며 접근성 저하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대전지역사  
무소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매년 무산되었다.  
올 해 2007년 마저 무산된다면 국가가 충청지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접수 3년 평균 439건, 차  
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  
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지역은 전국 5번째로 높다.  
또한 충청지역은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  
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

그리고 지방분권, 분산, 지역혁신을 위해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3년 여간 무산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인권보호를 넘어 인권에 대한 시각과 감수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

2007.10.23.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 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 1. 청원의 취지

지역형평성과 인권보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요청합니다.

### 2. 청원의 이유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는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보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권구제가 가능한 공적기관으로 중앙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지역사무소 3개 기관만이 있는 현재의 체계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의 국민들의 인권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적 역차별과 접근성 저하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2006년 3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및 서면질의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3개 지역사무소는 설치되었으나 오로지 대전지역사무소만이 매년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충청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접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면전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의 진정접수 중 대전지역은 전국 5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성매매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하는 등의 민간 인권단체는 있으나 이들 단체에 조사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구축,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교육격차, 주거불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지역은 지역사무소설치로 인해 인권 보호의 기반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의 무산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지방분권, 분산, 지역혁신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는 3년 여간 무산되었던 대전 지역사무소 설치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자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7.10.

청원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 집 1층)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청원내용

### 1. 청원 골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확약

### 2. 청원의 내용

- 2007년 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확약
  - 이후 단계적 설치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
  - 제19조관련 별표1 지역사무소의 명칭·위치및관할구역 : 대전지역사무소 추가
  - 제22조관련 별표4 지역사무소공무원정원표 : 대전지역사무소 소요정원 증원